

광주 남구의회, ‘예산 낭비’ vs ‘도시재생’ 찬반 논란

‘도시재생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서 통과
“기관 통합 불필요한 예산 소모”
“사단법인 통한 주민 주도 참여”
지난해 보은 인사 의혹 불거져

최근 광주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8일 광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기총) 소속 의원 5명 중 3명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31일 열린 제305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의원 11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부 의원들은 수적 공세를 앞세운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회 기능이 퇴색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설립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해 분산된 주민 중심 업무를 일원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단법인을 통해 주민 주도로 사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 사업이다.

남구의회 소속 A의원은 해당 동의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소모하고 규모를 키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수적 우위를 이용해 본회의에 부치는 행위가 자행되는 걸 보고 의회 역할이 상실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꾸짖었다.

B의원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두 센터를 업무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사단법인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면서 “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 마련, 리모델링 비용, 추가 인원 채용 등으로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센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시재생’ 사업이 연속성을 띠기 위해선 사단법인 설립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남구의회 소속 C의원은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양림동의 경우 2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를 통해 어떤 개선과 변화가 이뤄졌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게 집행된 예산을 사용하는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사단법인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할기관이 해당 사업을 도맡게 되면 담당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단법인 이 출범하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관리 조직이자 사후관리 조

직인 사단법인을 통한 주민 주도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구는 도시재생마을 협력센터 사업을 올해 하반기 출범과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일부 남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마을 협력센터의 조직설계 단계까지 책임지는 남구 기획실 관계자는 “문제 제기됐던 예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현재 소요되는 인건비를 최대한 넘지 않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현

재 사용 중인 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될 협력센터를 통해 기존에 중복됐던 사업을 통합하고 센터 이용 주민들의 접점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센터에서 진행하던 8개 사업과 새로 추진되는 13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관할기관 주관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영역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사단법인을 통해 기존 관할기관의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 주민밀착형 행정과, 혜택 등 관내 주민들이 사업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출연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남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 낭비·보은 인사 의혹 등이 불거져 부결된 바 있다.

찬반 논란 끝에 제 305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사업은 올해 하반기 출연금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



북구 야외수영장 2만명 돌파

광주 북구청에서 운영 중인 동강대·산동고 야외물놀이장 이용객이 2만명을 돌파한 8일 동강대 야외물놀이장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물놀이장을 찾은 입장객들에게 폭염 대비 물품으로 쿨도시를 증정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광주 남구 ‘토요 야시장 열기’ 불금에도 잇는다

백양로 상권 활성화 큰 도움
푸드존 점포 옥상부스 활용
차 없는 거리 운영 하지 않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주변 먹거리 명소인 토요 야시장이 금요일에도 문을 여는 이들 야시장으로 탈바꿈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토요 야시장이 지난 2일부터 금요일에도 문을 열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토요 야시장으로 출발한 이후 3개월 만에 금요일에도 개장하는 야시장으로 거듭난 것이다.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점주들이 야시장 확대 운영에 나선 것에 대해 남구는 백운광장 주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관계자는 “토요 야시장이 시작된 후부터 백양로 뿐만 아니라 백운광장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다”면서 “십수년간 한숨만 쉬었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시장 운영이 금요일과 토요일로 확대되면서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던 야시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구는 야시장 안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손잡고 매주 토요일 스트리트 푸드존 일대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지원했는데, 야시장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상



인들 요청에 따라 운영 전반을 이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은 8월부터 백양로 상인들이 도맡아 운영한다.

남구는 야시장 운영을 제외한 관리·감독에 전념하며, 특히 백양로 주변 통행 차량 및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요일 야시장 방문객은 길거리 테이블 대신 스트리트 푸드존 점포 위 옥상 부스를 활용해 맞이하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살수차를 이용해 야시장 주변 도로의 반사열도 낮추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상인들께서 토요 야시장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 목적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금·토 야시장으로 확대하자는 상인들 제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며 “야시장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불법 매입 ‘혐의 없음’ 내사 종결

부시장 재직 당시 부정 매입 의혹
경찰, ‘인과관계 불명확’ 결론

광주 서구갑 조인철(사진) 국회의원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의원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당시 시가 A씨의 투자사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을 맺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1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AI 전문기업의 수십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조 의원이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시에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조 후보가 주식을 산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종결을 내렸다.

경찰은 조 의원 일가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처벌할 수 없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직의 지위 등을 이용해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 일가가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시세 기준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조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법리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만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5월 글로벌 박람회 초대 감사해요”

중국 산시성·일본 사가현 교육당국
전남교육청에 감사 서한 보내
“도교육청과 교류 한층 진전되길”

지난 5월 여수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여했던 중국 산시성 교육청과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가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교육청은 양군 서기 명의의 편지에서 “이번 박람회 참가와 캠프활동을 통해 산시성 청소년들은 전남 문화와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도교육청과 산시성교육청의 교육협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도 가이 나옴이 교육장 명의의 편지를 통해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와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시민글로벌 캠프에 초대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접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귀중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과의 교류가 한층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교육감도 이들 두 나라 교육당국에 답장을 보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여하고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주비 기자